



“소아암·백혈병 완치 축하해요” 15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제7회 소아암·백혈병 완치잔치’에서 완치된 어린이들이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과 함께 축하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소아암과 백혈병을 깨끗이 이겨낸 어린이 45명과 가족,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위리량기자 jwii@kwangju.co.kr

김만복 국정원장 사의

대화록 유출 책임 ... 인수위 ‘철저 규명’

김만복 국정원장은 15일 자신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간의 대화록 유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6면>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 국정원장인 저와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록이 보도돼 물의를 야기하는데 대해 국가 최고정보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록 유출 경위에 언급, “지난 9일 오후 국정원 관계관을 통해 모 언론사 간부에게 면담록이 포함된 국

정원장의 선거 하루 전 방북 배경 및 경과 관련 자료를 비보도를 전제로 전달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 불찰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면담록은 12월18일 나의 방북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소위 ‘북풍공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간에 불필요한 의혹이 확대 재생산돼 국민분열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대선과정에서 철저한 언론사 간부에게 면담록이 포함된 국

주변인사들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했다”면서 언론사 간부에게 전달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해 12월18일 김 원장이 방북, 김양건 부장과 만나 대화한 내용을 담은 인수위 보고 문건이 지난 10일 국내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그간 자체 감찰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김 국정원장이 자신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해서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는 국가 문란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철저한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호남운하로 영산강 살리자

수질 획기적 개선 ... 지역경제 막대한 효과

전남도, 인수위에 적극 건의

한반도 대운하가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전남도가 대운하의 단위사업이 될 호남운하 건설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호남운하사업이 ▲수십년간 퇴적된 강바닥 오니(汚泥)를 준설함으로써 최악의 수준인 영산강 수질을 일거에 개선시키고 ▲중전부터

추진해오던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며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건설사업으로 지역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 대운하 TF팀’에 영산강 하구둑~광주 광신대교 83.59km 영산강 전구간을 평균 6m 깊이로 준설해 옛 뱃길을 복원하자는 ‘호남운하’건설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강폭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평균 60m로 잡고 있는데 비해 전남도는 120m 이상으로 하자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이날 “영산강은 수질이 4~5급수로 공업용수로도 쓰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오염된 퇴적물을 준설하고 주변 생활하

수·축산하수 등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항상 여유있는 수량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며 ▲영산강 옛 뱃길의 친환경적인 복원 ▲안벽한 수질 정화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신도시산업 육성 ▲관광자원 확보 등을 건의했다.

도는 또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검토해 왔던 하구연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방안을 폐기하고, 대신 8개의 갑문과 60m규모의 통선문을 남악신도시 쪽에 새로 만들어 2천500t급의 선박을 드나들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2억5천만여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영산호의 하구둑을 개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2억t규모의 새로운 댐을 막아야 한다는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와 함께 하천 고저를 감안해 상류로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식 갑문을 2~3개 더 설치하고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기존의 교량(6곳)과 철로

(2곳), 수중보(3곳) 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같은 기본 원칙하에 운하 주변을 생태·레저관광·물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상호텔 유치 ▲은퇴자 시티조성 ▲실버산업 유치 ▲농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공장 개발도 해 줄것을 건의했다. 도는 이 경우 모두 6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측은 이같은 건의에 대해 “상당히 좋은 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대로 두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은 영산강 수질을 언제 개선하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 기회에 영산강 옛 뱃길을 복원하면서 수질을 완벽하게 개선하고 물길을 따라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18부 4처 → 14부 2처’

정부 조직개편안 정당 협의 거쳐 곧 확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4부2처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 금명간 주요 정당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16일 중대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에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정식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아직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인수위 측이 안을 마련해 정당과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며 “빠르면 16일, 늦어도 18일까지는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현행 18부 가운데 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여성부·과학기술부 등 4부를 통합해 14부로 축소조정하고 4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존처, 법제처)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를 통합해 2처로 줄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해안 폐사 갯지렁이·칠게 발견

타르 2차 오염 현실화 되나

특별재난지역 오늘 결정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로 타르 피해를 입은 신안과 무안 등 일부 해안가에서 폐사한 갯지렁이와 칠게 등이 발견, 타르에 의한 2차 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신안지역 해안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2~3일 사이 갯벌에 폐사한 갯지렁이나 칠게 등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이들 갯벌 생물들의 폐사가 자연적인 것인지 또는 타르에 의한 영향인지를 역학조사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일단 타르가 덮친 지역은 타르 성분 뿐만 아니라 태안 앞바다에서 사용됐던 유화제 성분까지 갯벌에 스며들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르에 의한 2차 오염 여부를 가리는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하지만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가 전남지역 해안까지 내려 오는 데 3주 가량 소요돼 휘발성 성분 등 독성이 많이 약화된 만큼 갯벌 생물들의 폐사가 타르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타르 피해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외딴 섬 지역이나 무인도 등은 아직도 방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타르 피해를 입은 전남 서해안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16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목포=이성선기자 sslse@